

2021 AGENDA 10

생태문명
코로나19시대
탄소중립
초광역 협력
디지털 돌봄
새만금
지역고용안전망
소부장, 수소산업
농식품산업
위라벨시대



코로나 19 위기극복, 전북형 뉴딜 실현으로 대도약 시대 앞당기자

01

전환사회 전라북도, 생태문명으로 대도약을 이뤄가자

1. 생태문명 전환, 절박함의 시대적 과제
2. 일상에서 시작하는 전환사회로의 담대한 실천
3. 사회체계 전환과 제도혁신, 생태문명의 핵심

02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과 문화의 재편을 준비하자

1.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리모트워크(remote work)
2.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문화부문 한국판뉴딜
3. 포스트 코로나19시대, 전북형 휴양·힐링 거점 조성
4. 언택트시대를 위한 전북형 비대면 플랫폼 구축

03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넷제로) 전략을 수립하자

1. 탄소중립 로드맵 구축으로 그린인프라 전환
2. 선도적 에너지 전환으로 그린뉴딜 견인
3.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거버넌스 구축

04

전북 대도약의 엔진, 초광역협력으로 성장판을 확장시키자

1. 초광역권에서 살아남기, 전북 독자권역의 출구전략 마련
2. 유연한 초광역협력으로 전북 대도약 가속화
3. 행정수도 이전, 전북을 행정수도 배후도시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 사령탑으로

05

돌봄의 일상화와 과학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

1. 일상적 돌봄 환경조성 및 공공의료 기반 강화
2. 예방적 일상 방역체계의 지속화
3. 돌봄의 과학화, 일상을 위한 디지털 돌봄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사회적 변화를 겪었으며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1년 전라북도는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 적응, 생태문명으로 전환, 탄소중립, 초광역 협력으로 전북 성장판 확장,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탄소·수소산업 융합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전북형 뉴딜 구현을 위한 새로운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대도약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영정치원(寧靜致遠)’자세가 필요하다.

06

새만금 시대의 개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1. 2단계 수질대책 후속대응과 생태환경 복원
2. 속도감 있는 내부용지 조성과 투자유치 본격화
3. 공공주도형 先투자를 통한 내부 인프라 적기 조성

07

전북형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보하자

1.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보
2. 전북형 고용 지수 개발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
3. 전북형 생활업 개발로 플랫폼 기반 일자리 정책 선도
4. 대학캠퍼스와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혁신인재 양성

08

탄소-수소 융복합은 전북산업의 미래다

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조기 정착, 전북과 동행
2. 깨끗한 그린수소, 전북이 보다 빠르게 선점
3. 전북주력산업 고도화, 탄소-수소산업 융복합을 통해 촉진

09

지역주도형 글로벌 농식품산업 혁신체계를 구축하자

1. 체질개선을 통한 글로벌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
2. 지능형 콜드체인 농식품 물류기반 구축
3. 지역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통한 푸드시스템 강화

10

팬데믹의 성인지적 대응으로 일·생활 균형을 확산시키자

1. 일·생활 균형 확산으로 위기대응 및 삶의 질 제고
2. 성인지적 고용대책으로 여성고용 안전망 강화
3. 돌봄체계 재편성으로 지속가능한 돌봄 지원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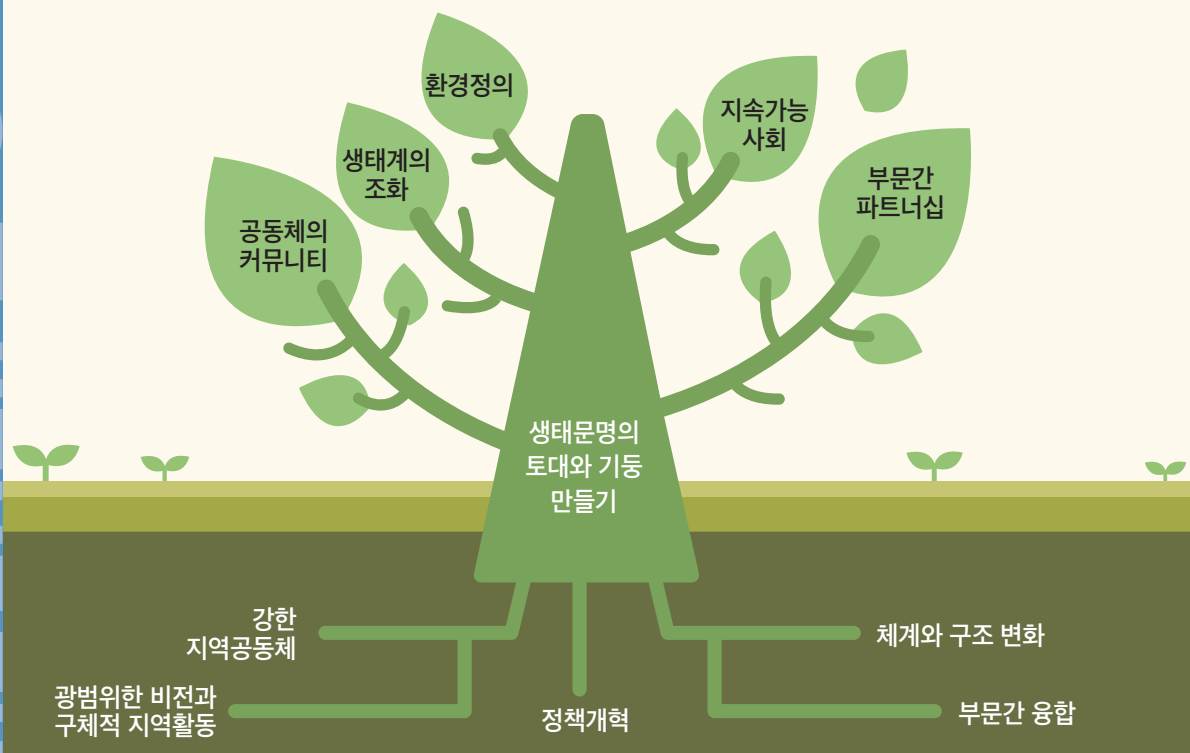
생태문명

전환사회 전라북도, 생태문명으로 대도약을 이뤄가자

‘화학백신(의학)과 행동백신(사회적 거리두기)’을 넘어 ‘생태백신(생태적 사회체계)’을 갖춰야 한다. 밖으로 생태적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안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구조 전반의 ‘거대한 전환’이 절실하다.

‘전환사회’란 회복력 있는 지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실험이다. 20년 후를 목표로 행동계획을 지금 세우고 적극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회복력, 생태적 회복력, 경제적 회복력’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충격에 대비한 소프트웨어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전환사회’의 이유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한, 생태적 용량을 넘어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체계’와 ‘생활양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전환사회로 나아가는 실천수단이 바로 ‘생태문명으로 전환’이다. ‘성장거점’을 통한 낙수효과가 현실화되지 못한 우리 지역에서, 생태문명로의 전환사회 실천은 생존전략이며, 대도약의 실체이다.



>> 추진과제 1**생태문명 전환,
절박함의 시대적 과제**

좌초자산인 화석연료 채굴에 기반한 산업문명은 자원고갈·환경파괴를 현실화해 왔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맞이할 현실은 파국적 결과이다.

생태문명은 산업문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념이다. 기후위기·환경파괴 문제와 연관이 깊지만, 그것을 넘어 지구적 인간의 생활양식을 아우른다. 경제·정치·생산·소비·농업 등 사회적·경제적 시스템을 지구적 한계를 반영하여 재설계하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향한 비전이다. 자연의 원시적 순수성으로 회귀는 절대 아니다. 사람과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회복력 높은 사회로 전환해가는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기 보다 현실적 실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개발을 통한 무한한 진보가 아니라 물질적·사회적 순환의 과정이다. 지구적 사고에 기반하지만 지역의 현실에 발 딛고 실천해야하는 당장의 과제이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절박함의 시대정신이다.

>> 추진과제 2**일상에서 시작하는
전환사회로의 담대한 실천**

모든 이윤추구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의 가치가 팽배한 사회이다. 자조적 돌봄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 이익은 경시되어 왔다. 이제는 건강한 로컬 경제의 복원만이 지구 중심적 삶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역기반 금융체계의 확립, 건전한 경제지표(예를 들면 GPI 보급), 재생에너지 생산 확산, 다품종 유기농 생산지의 확대, 로컬 생산자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전환으로 이행은 위로부터의 강력하고 통일된 접근이 아니다. 경제

를 넘나드는 혁신실험, 다양한 집단이 함께하는 참여적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협업을 바탕으로 한다.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환경적 기술도입, 생태문화의 적용을 결합할 때 지역의 생태적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 GPI(참진보지수, Genuine Progress Indicator) : GNP, GDP 등의 대안으로 등장한 지표, 인간과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시장의 활동과 환경오염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측정

>> 추진과제 3**사회체계 전환과 제도혁신,
생태문명의 핵심**

생태문명으로 전환은 생태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대응하는 담대한 실천이 관건이다. 첫째, 정책지향을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발이 발전을 가져온다는 선형적 인과를 넘어 사회적 평등을 전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정책선택을 ‘최선 중 최선에서 최악 중의 최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모두를 고려한 최선의 선택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방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한 대응이 중요하다. 셋째, 정책개발을 ‘관성적 사고에서 생태적 상상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사고, 공간적 시간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정책결정의 방식을 제도정치에 가둬서는 안된다. 지역의 공동체와 시민 사회 등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바탕위에 사회규범을 만들고, 주민자치·생태전환 실천 프로젝트와 학교·사회교육 확대 등을 전개해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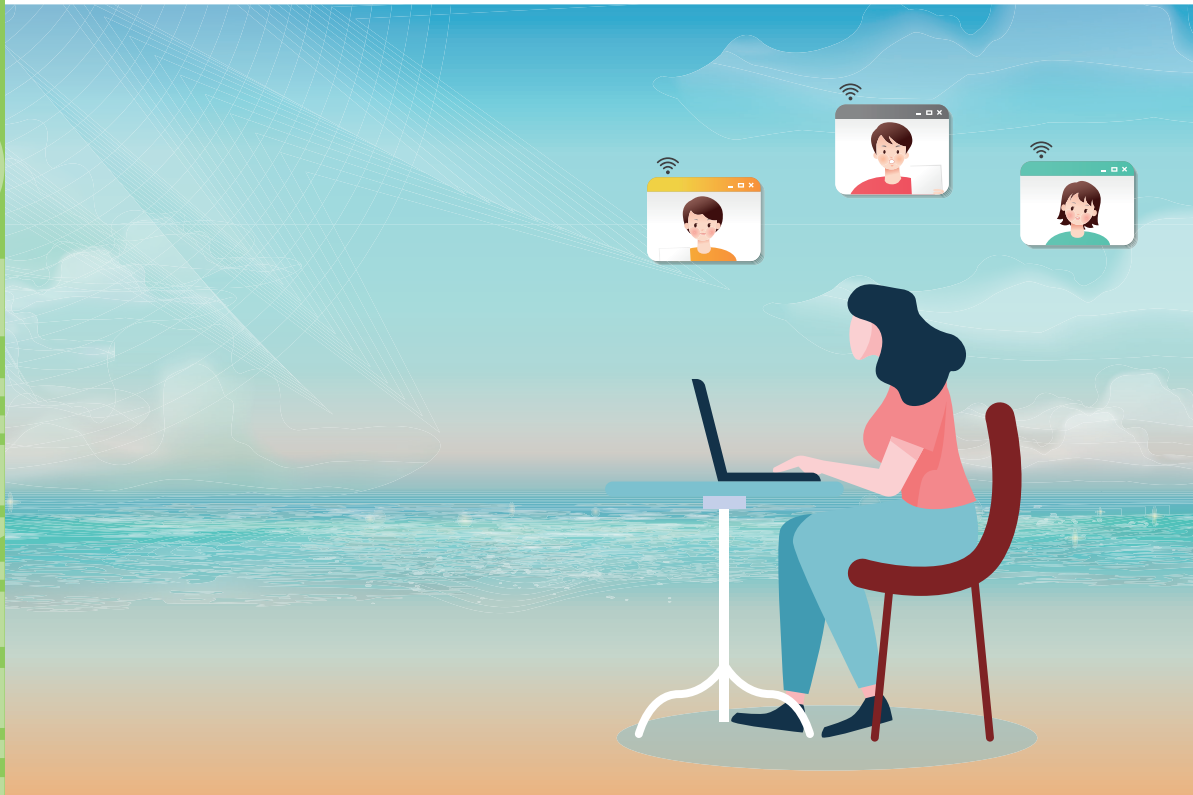
02

코로나19
시대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과 문화의 재편을 준비하자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에 닥친 가장 큰 변화는 콘택트 라이프스타일에서 언택트 라이프스타일로의 변화일 것이다.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이 확산되고 홈트레이닝과 홈파티 및 랜선여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이러한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을 연결해 주는 것은 인터넷 플랫폼이다. 일하는 방식과 휴식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대에 전라북도는 이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언택트 시대의 트렌드에서 소외될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해소와 전북의 생태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일과 휴식의 방식에 맞는 콘텐츠 발굴은 코로나시대를 전북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다.

2021
AGENDA 10



>> 추진과제 1**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리모트워크(remote work)**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시작된 리모트 워크는 집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유연하게 일을 하거나 장기 출장을 통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EU와 일본, 미국 등은 2000년대 초부터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공공기관을 필두로 지식서비스 및 IT관련 기업의 원격근무를 장려하고 있다. 향후 국회와 행정수도 이전은 세종시 배후지역인 전라북도에게 새로운 기회요소라고 할 수 있다. 뛰어난 생태적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리모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전북을 혁신적인 인재가 모여드는 리모트워크의 허브로 만들어 보자.

>> 추진과제 2**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문화부문 전북형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혁신 방향을 중심축으로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콘텐츠 개발·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가상·증강현실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향상을 내세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화나 게임을 넘어 교육과 전시 등까지 확장하고, 콘텐츠의 저장과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때문에 사이버전라유학진흥원 같은 국학의 진흥과 아카이브의 구축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유산부본도 신기술을 토대로 향유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야 유물전시관 등의 건립 초기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공연 예술제는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 조성과 온라인 예술활동·문화예술교육 등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추진과제 3**포스트 코로나19시대,
전북형 휴양·힐링 거점 조성**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북의 강점 자원인 휴양·힐링자원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형 웰니스 관광거점 구축을 위한 치유관광상품 개발, 홍보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 최초 생태관광 브랜드의 전국적 확산 도모를 위해 통합브랜드 홍보 강화 및 보다 편리한 환경 구축 등도 필요하다. 또한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레저·캠핑 수요에 대한 관광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전북 문화·관광자원의 재발견 및 재해석을 통한 숨은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한 체험관광 1번지」를 전북관광 모델로 만들어가야 한다.

>> 추진과제 4**언택트시대를 위한
전북형 비대면 플랫폼 구축**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교육, 행정서비스, 문화향유 등의 비대면 서비스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을 지원해 시민들의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역주민들이 홈 트레이닝과 원격수업 및 다양한 문화향유를 비대면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전북형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도민 모두가 비대면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라북도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03

탄소중립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넷제로) 전략을 수립하자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인 기후변화 문제 인식에 기여하였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은 인류 생존을 위한 의무가 되었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서 인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 2℃이하 유지를 위한 목표설정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20.10.28)하고 추진전략(2020.12.07)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공정전환의 3대 전략과 제도적 기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주도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행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전북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탄소중립 전략수립을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 탄소중립 :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



>> 추진과제 1**탄소중립 로드맵 구축으로
그린인프라 전환**

전북형 뉴딜이 단기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탄소중립 전략은 장기 전략이므로 그린뉴딜 사업을 마중물로 3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세부 사업, 단계 사업, 추진체계와 중간목표 설정 등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기술적용, 기존 건물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화석연료에 의존한 수송체계를 전기와 수소 기반의 그린 모빌리티로 전환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공공시설 전환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약화된 산림(흡수원)의 중장기 개선 및 신규 그린인프라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축산, 농업, 폐기물 등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도 동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30년간의 큰 변화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는 밑그림 마련이 필요하다.

>> 추진과제 2**선도적 에너지 전환으로
그린뉴딜 견인**

세계 에너지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어 전라북도 역시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연평균 20.9%(2009~2017)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재생에너지의 13.0%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향후 전라북도가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와 서남권, 군산권 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송배전망 확충, ESS 구축 및 그린수소 생산과 함께 도시 및 농어촌의 에너지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 추진과제 3**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거버넌스 구축**

환경정책에서 거버넌스 구성은 정책전달의 중요한 수단이자 필수적인 추진요소가 되었다. 「전라북도 기후변화 기본계획」(2019, 전라북도)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체계로 행정과 유관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 거버넌스와 도민이 참여하여 실천하는 참여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6월 제정된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4대강 유역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2021년)하게 되며 효율적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해 유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가 참여하는 유역 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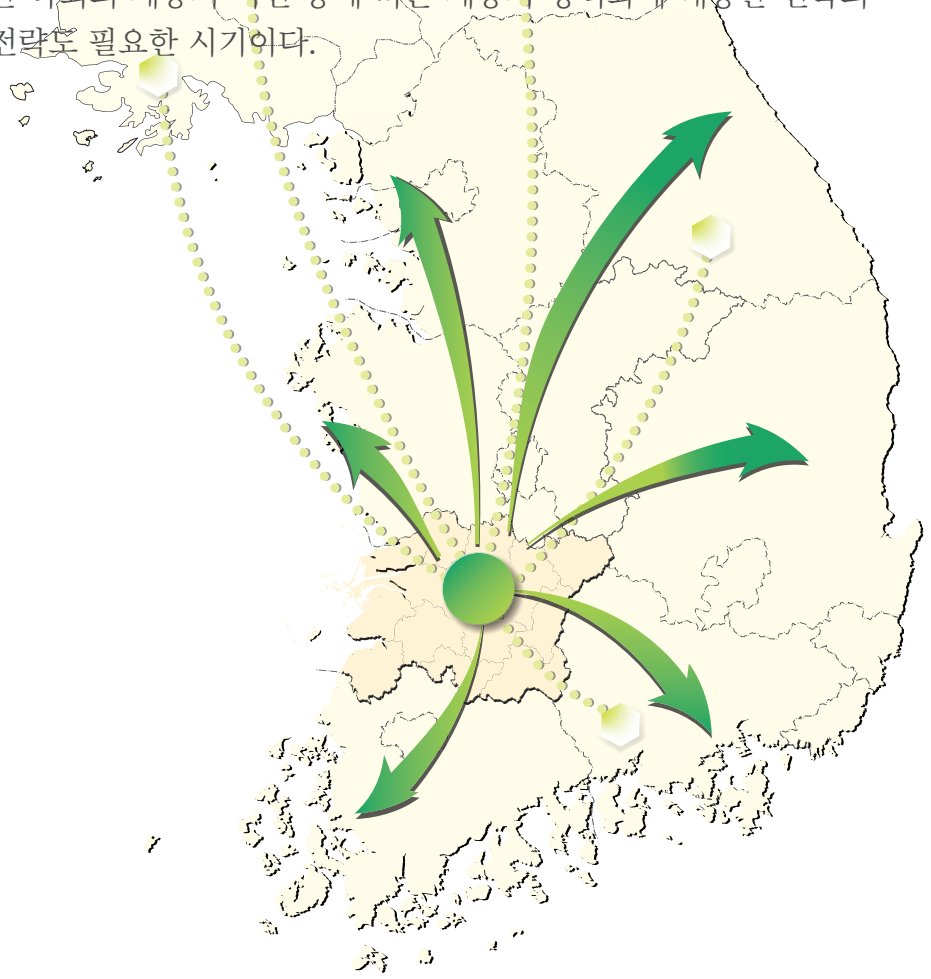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구성원들이 실천사업을 함께 참여할 때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후·환경 위기극복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해야 하는 만큼 실천 거버넌스 구축이 선결 조건이다.

04

초광역 협력

전북 대도약의 엔진, 초광역협력으로 성장판을 확장시키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거점으로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에서 행정적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충청권은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독자권역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인접 시도들의 초광역 대도시권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생존을 위한 출구전략이 절실하다. 안으로 시군의 연계·협력적 기능과 역할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주변 대도시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밖으로 대경권, 광주·전남권, 충청권 등과 정책단위로 협력할 수 있는 초광역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으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에 따른 세종시 광역화에 대응한 전북의 전략도 필요한 시기이다.



>> 추진과제 1**초광역권에서 살아남기,
전북 독자권역의 출구전략 마련**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一極)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 등을 명분으로 하는 3+2+3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하였다. 수도권, 부울경권, 충청권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은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과 강원, 제주는 강소권 메가시티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전북이 호남권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권역으로서 위상 공고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타메가시티와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초광역권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부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과 기능적 연계 기반의 메가시티로 방향 설정을 하여 타 권역과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 추진과제 2**유연한 초광역협력으로
전북 대도약 가속화**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에 대한 논의로 전북의 지정학적 강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북으로 충청권, 남으로 광주·전남권, 동북으로 대구·경북권, 동남으로 부울경권 등과 인접하고 있는 전북은 초광역권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의 모든 그랜드·통합 메가시티와 인접한 지리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초광역 협력이 가능한 권역이다. 충청권과 금강, 백제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대구경북권과

홀로그램, 동학, 백두대간 등의 연계협력, 광주·전남권과 전라천년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초광역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해 전북의 성장판을 확대하고 전북 대도약 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 추진과제 3**행정수도 이전, 전북을 행정수도
배후도시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
사령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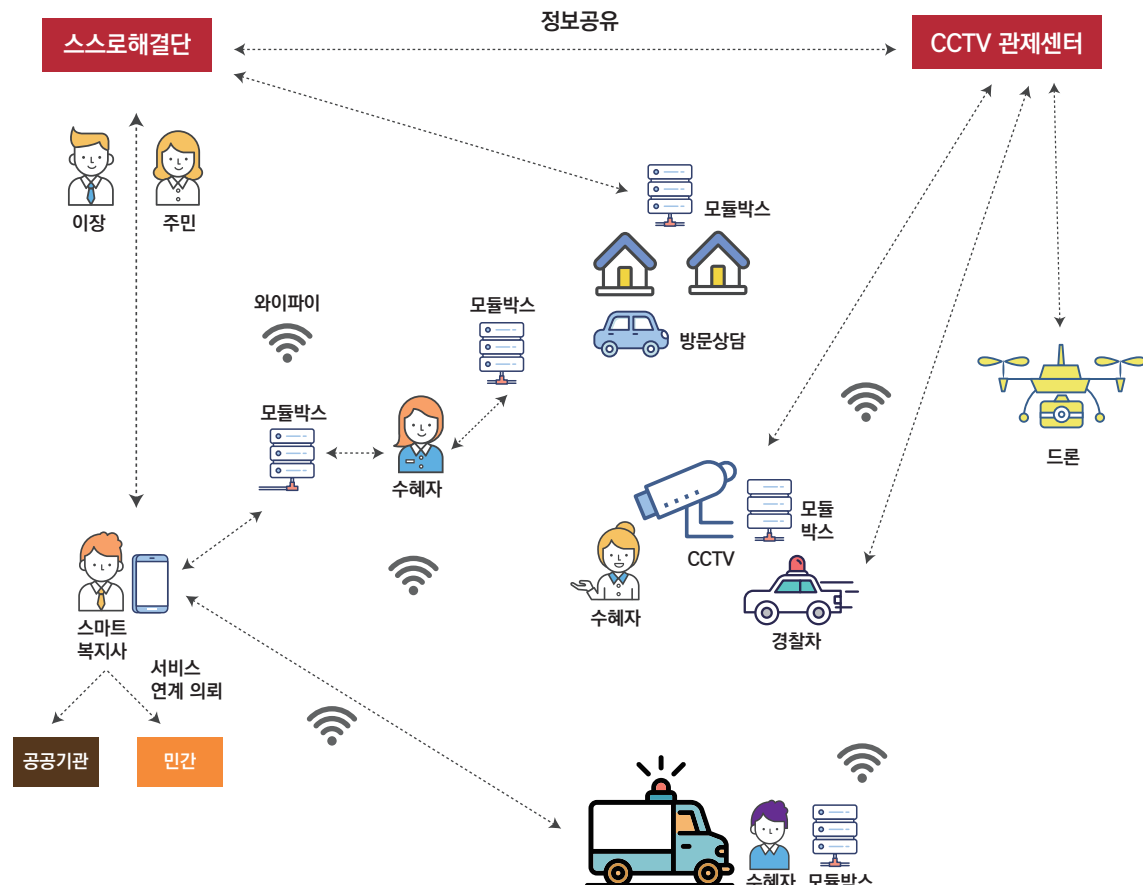
국회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 127억원이 반영되었다. 세종시에 국회가 이전되면 이미 세종에 내려간 정부 부처 상임위원회 11개 이전과 더불어 예결위,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의 동반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 세종 이전으로 행정수도가 조성될 경우 세종시가 서울처럼 주변 지역을 빨아들이는 또 다른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전라북도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사령탑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으로 전라북도와 세종시의 행정 기능적 연계와 분산을 통해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추진해야 한다.

05

디지털 돌봄

돌봄의 일상화와 과학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

코로나19로 인하여 「돌봄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 정책에도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정책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적 돌봄의 정책과 방식의 한계가 발생하였고 양적 정책으로 현재의 돌봄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제 전라북도 돌봄의 정책은 사회화, 과학화,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 책임을 균형 있게 사회가 분배하여 책임을 나누고, AI와 ICT 같은 돌봄의 과학화를 기반한 생활의 돌봄화를 추진하며, 일상적이고 예방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튼튼한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여 전반적인 전라북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 추진과제 1**일상적 돌봄 환경조성 및
공공의료 기반 강화**

코로나19의 감소나 종식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돌봄시설의 서비스 제공방식은 기존과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기정도에 따라 범주화하고 시설의 휴관시에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선별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기관 중심의 돌봄이 아닌 가정 내 일상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노동시간을 제도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감염병 시대의 예방적 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감염병전문병원 및 전담병원의 확충도 필요하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함께 ICT를 활용한 비대면 의료기반 확충하여 보건의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 추진과제 2**예방적 일상 방역체계의 지속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의 일상으로 조기 회복하기 위해서 생활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을 통한 감염차단 성과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2021년이 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11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행동으로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였으나 생활방역은 이 중 1단계에 속하며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및 집단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현재 일 확진자 수가 1,000

명을 넘어서 최상의 단계인 「전국유행단계」로 진입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2021년에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뿐만 아닌 예방적 일상을 통해 방역체계를 지속하는 도민의 의지와 실천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 추진과제 3**돌봄의 과학화,
일상을 위한 디지털 돌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돌봄의 사각지대 및 서비스 격차가 누적되고 선제적 돌봄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1인가구가 전체 10가구 중 3가구(30.2%)로 나타나(통계청, 2020)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돌봄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돌봄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ICT, AI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과학화는 돌봄 업무의 자동화를 비롯하여 개인 수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생활빅데이터 활용 건강 및 위험 예측, 자택돌봄지원, 돌봄로봇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제공서비스, 원격돌봄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제 돌봄서비스도 과학화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의 과학화를 반영하여 AI, 돌봄로봇, VR, AR, IOT 등 ICT기반 등 디지털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지역사회 생활 안전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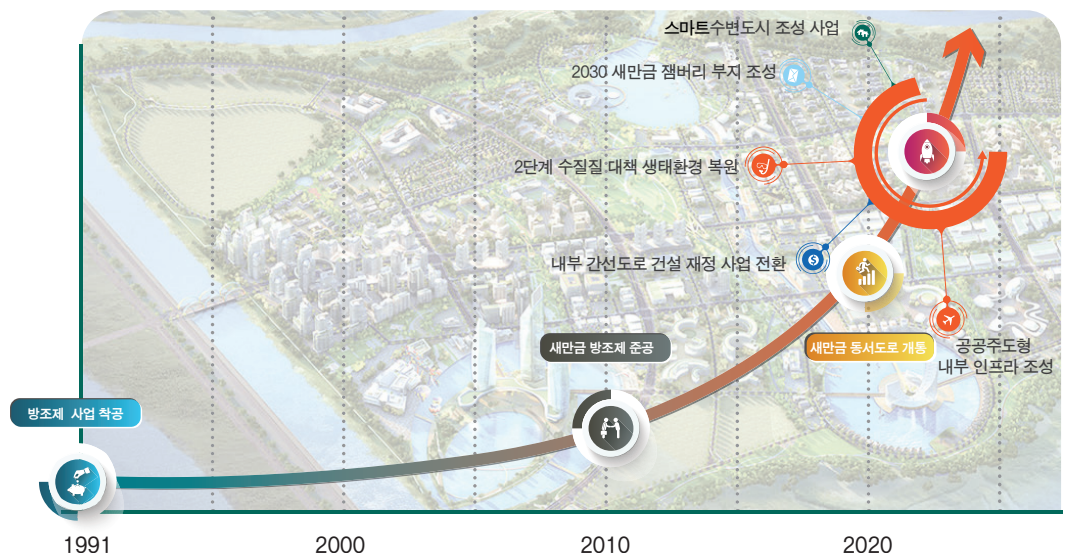
새만금

새만금 시대의 개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지지부진 하던 새만금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2020년 말 개통된 동서2축 내부간선도로를 시작으로 2021년도에서 내부용지 조성과 함께 기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새만금사업의 마중물이 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새만금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장기임대용지를 통해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새만금 생태복원을 위한 1단계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이 2021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그린뉴딜을 선도하게 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바야흐로 새로운 문명을 열게 될 새만금 시대의 개막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기용지 공급과 투자지원을 통한 투자유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내부도로망 건설 국비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구축과 미래도시 새만금을 위한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 새만금사업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에 대한 후속대응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추진과제 1

2단계 수질대책 후속대응과 생태환경 복원

2020년에 실시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해수유통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였으며 새만금위원회는 항구적 해수유통을 유보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을 이용한 해수유출입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유통량은 2배로 증가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새만금호 내외로 유출입하는 해수량의 증가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과 밖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5m로 배수갑문이 운영되며 담수화를 진행하면서 안정화로 진행되던 담수생태계는 다시 변화를 요구 받게 될 것이며 이전 보다 많은 양의 담수가 배출되는 해양생태계 역시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새만금 개발비용, 수산업 등 사회적 비용도 추가적으로 요구받게 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판단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 추진과제 2

속도감 있는 내부용지 조성과 투자유치 본격화

2021년에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함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조성이 본격화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마중물이 될 스마트수변도시와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용지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수립중인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도 새만금 내부 용지 조성에 있어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재정 및 제도

적 지원방안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 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은 미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데서 벗어나 국가사업으로서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공공의 선도적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도시형 인프라는 물론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기존 국내 외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화된 투자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추진과제 3

공공주도형 先투자를 통한 내부 인프라 적기 조성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의 사업주체가 불확실하여 광역 도로 및 관로를 개별사업자가 설치하는 현행 사업 추진방식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해소 및 사업지구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해 내부 간선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하여야 한다. 동서·남북도로 및 순환링 교량(국비사업), 6개 노선 및 순환링 도로 등 우선 추진 구간을 선별하고 단계적 추진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도형 내부인프라 적기 조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새만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미리 선보일 수 있는 시험공간이자 첨단모빌리티(육상·항공·해상) 실증단지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미래 교통기술의 경연장이 될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향유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 간선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이나 규제특례지구 지정 등 새만금 개발의 종합적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07

지역고용 안전망

전북형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보하자

2020년은 OCI 군산공장 생산 중단을 시작으로 제조업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이 겹치면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었던 시기이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일자리 공급원인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대학,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고용 시스템이 기반되어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맞춤형 일자리 수급체계,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역 일자리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코로나19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자리 창출



>> 추진과제 1**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보**

2019년 광주를 시작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라북도는 군산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전주와 완주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전라북도는 과거 대기업의 일방적인 철수로 인해 급격한 경기 침체와 함께 고용시장 불안을 겪어 왔다. 과거의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노동자,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시장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첫 걸음이 군산이었고 2021년은 전주,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 추진과제 2**전북형 고용 지수 개발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28.4조원을 투입하여 33만 9,000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 확대적용,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고용시장의 안정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장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에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산업 분야별 일자리 미스매치지수 개발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원활한 인재 양성 및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AI대학원 지정, SW중심대학 운영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추진과제 3**전북형 생활앱 개발로
플랫폼 기반 일자리 정책 선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속도가 빨라졌다. 플랫폼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혁신적인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전북도민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전북도내 소상공인은 플랫폼 이용로 폭등과 지역경제 불황의 이중고를 버티고 있다.

급격한 변화에 법, 제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열악한 노동여건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를 착취한 이익을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급변하는 플랫폼 사회에서 도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전북형 생활앱 개발과 플랫폼 기반의 착한 일자리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 ‘도민의 참여’로 ‘지역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활동’이 ‘지역경제에 선순환’하도록 주도해야 한다.

>> 추진과제 4**대학캠퍼스와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혁신인재 양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혁신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라북도 전략(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대학, 전라북도와 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특히 대학캠퍼스의 교육시설, 연구장비, 각종 지원시설 등을 활용한 인재양성과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와 기업은 전략(특화) 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창업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대학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대학캠퍼스와 상생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라북도, 대학, 기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08

소부장,
수소산업

탄소-수소 융복합은 전북산업의 미래다

2021년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그간 전북이 오랫동안 기반을 다져온 탄소소재 산업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이행으로 친환경 소재개발이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여건을 갖춰가고 있는 수소산업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그린수소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탄소와 수소는 수소상용차, 수소건설기계 등에 필수 핵심부품인 수소연료탱크에서 상호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적 가치사슬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전북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며 전북이 탄소와 수소로 산업구조의 저탄소화를 앞장서야 할 이유이다.



>> 추진과제 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조기 정착, 전북과 동행

전라북도는 200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탄소산업을 주력산업으로 꾸준히 육성해 왔으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역의 탄소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탄소섬유를 핵심 소재 중 하나로 두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후 2020년 탄소소재법 개정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게 되었고, 2021년 정식으로 국가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전라북도에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수요 창출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 추진과제 2

깨끗한 그린수소, 전북이 보다 빠르게 선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에서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매우 도전적이 과제를 선언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그린수소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전북에게 매우 큰 기회요소라 할 수 있다. 국가적 실증단계에 머물고 있는 그린수소가 탄소중립 시대에 핵심원료가 되기 위해서 보다 저렴하고 쉽게 소비할 수는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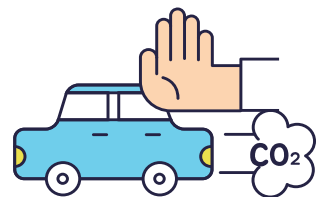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새

만금을 사업대상지로 선택하고 그린수소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은 대규모 생산된 그린수소를 가까운 새만금과 전북에서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전북 그린수소에 규모와 속도의 경쟁이 요구되는 2021년이다.

>> 추진과제 3

전북주력산업 고도화, 탄소-수소산업 융복합을 통해 촉진

수소경제 이행으로 탄소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전북은 수소와 탄소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경량화 소재, 연료탱크, 구조재 등 미래형 자동차 부품과 탄소소재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블레이드 소재, 태양광발전 실리콘 잉곳 생산 등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탄소산업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은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와 조성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등 전북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라북도 미래 주력산업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방향 설정이 요구되는 2021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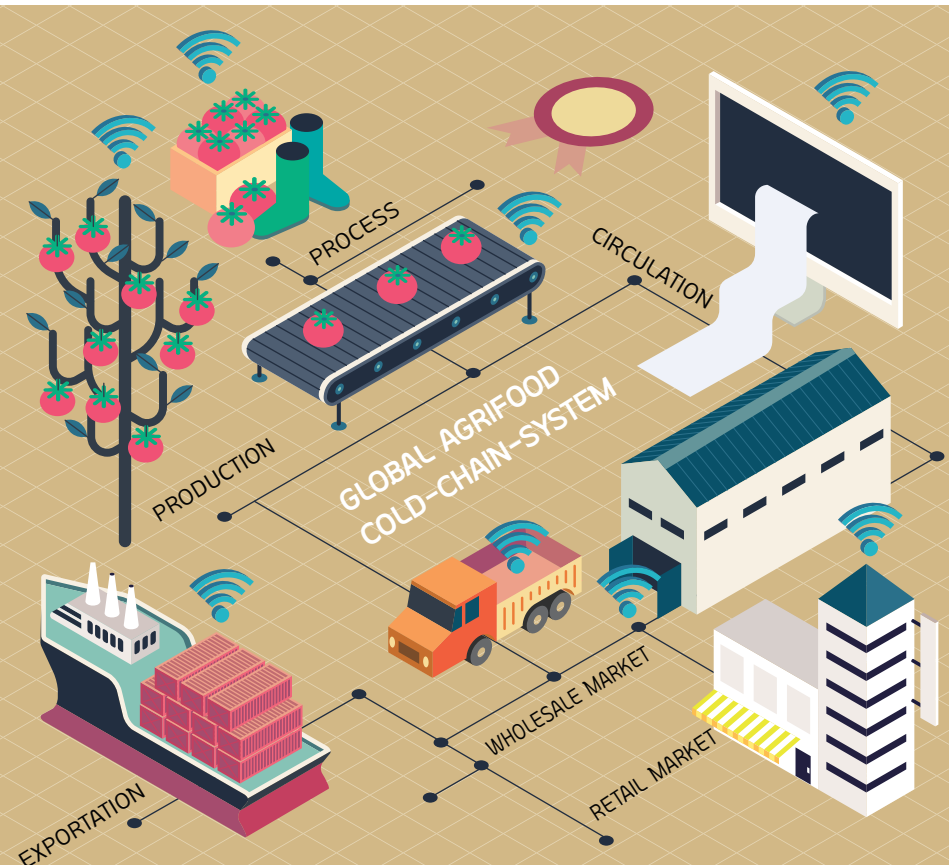


09

농식품 산업

지역주도형 글로벌 농식품산업 혁신체계를 구축하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식품분야의 4차산업 혁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생산-소비 트렌드 확산과 물류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농식품산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농어업과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를 미래 비전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분야와 연계 발전을 모색해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수준의 농식품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체질개선과 투자활동을 장려하고, 글로벌 농식품 콜드체인 물류표준을 선점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모색해야한다. 나아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한 지역상생형 모델을 만들어가는 통합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추진과제 1**체질개선을 통한
글로벌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안전과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식품산업의 생산-제조-가공-유통 등 전 단계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정보의 가치창출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5G·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식품 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으로 가공공정의 표준화된 생산시스템 조성이 요구된다.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제조·가공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천기술 및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 금융인프라 조성이 요구된다.

>> 추진과제 2**지능형 콜드체인 농식품
물류기반 구축**

코로나19 지속으로 산업분야별로 호황과 불황이 좌우되는 시장경제의 현실에 직면해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비를 줄일 수 없는 비탄력적인 농식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전라북도는 농식품 수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분야의 혁신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기업 중심으로 자체적인 콜드체인망을 운영하는 현실에서,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점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콜

드체인 물류표준을 수립하는 혁신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취지에 맞게 「지능형 콜드체인 농식품 물류기반」을 구축하여 비대면 시대의 농식품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추진과제 3**지역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통한
푸드시스템 강화**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구조와 시장환경 변화는 기존의 농식품산업에 대한 변화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은 별개로 인식하여 대응해왔다. 이제 푸드시스템의 관점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연계 추진해가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먼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산물이 식품기업의 고품질 원재료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식품기업의 수요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농수산업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체들의 소통채널과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지역상행형 모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확장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워라밸
시대

팬데믹의 성인지적 대응으로 일·생활 균형을 확산시키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성 및 가족 정책에서도 장기대책이 요구된다. 일·생활균형제도가 코로나19 상황의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떠오름에 따라 기업유형, 고용형태, 성별, 소득 등을 고려한 촘촘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으로 일·생활 균형의 확산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위기는 고용취약계층인 여성 비정규직에 집중되었다. 여성 노동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노동차별 예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여성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집중 분야인 돌봄노동의 안전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가 요청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심화, 교육 격차 확대는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으로 전환과 소규모 다시설체계, 공적 개별 돌봄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2021
AGENDA 10



>> 추진과제 1**일·생활 균형 확산으로
위기대응 및 삶의 질 제고**

그동안 일·생활균형(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저출산 위기에 대한 해법이나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어 왔으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기업경영과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중요성을 예고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등 일·생활균형 제도 확산과 활용을 통해 위기대응과 삶의 질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업유형, 고용형태, 성별, 가구소득 등에 따른 일·생활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과 제도 활용의 모니터링 강화, 조직의 유연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추진과제 2**성인지적 고용대책으로
여성고용 안전망 강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은 고용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고,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도소매업 등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영역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재편에서 서비스 노동과 돌봄노동, 플랫폼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정규직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고용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확대 실시와 사업장에 대한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출하여 기업들 스스로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 추진과제 3**돌봄체계 재편성으로
지속가능한 돌봄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심화, 교육 격차 확대와 여성과 가족 중심의 돌봄 노동 부담 급증 등 현행 돌봄 체계의 위기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언제 어디서든 잠깐 멈춤이 불가능한 돌봄을 지속가능하게하기 위해서 돌봄체계 재편성과 혁신적이고도 근본적인 돌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협력 돌봄으로 전환과 소규모 다시설 체계로의 전환, 공적 개별 돌봄 체계 구축, 무급·저임금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재평가 및 가정 내 아동 돌봄 방식의 다양화와 여성중심의 돌봄에서 함께 돌봄으로의 인식개선 등의 돌봄 뉴딜을 추진해야 할 때다.



2021 AGENDA 10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_ 063-280-7100 Fax_ 063-286-9206

발행인_ 김선기 발행처_ 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